

< 2023년 행정사 박문각 서울법학원 행정절차론 총평 >

- 이정민 강사 -

안녕하세요? 박문각 서울법학원에서 행정절차론을 맡고 있는 이정민입니다.

먼저 시험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제가 작성한 모범답안은 70점+@ 목표로 작성된 답안입니다.

<모범답안 점수 +@, -@> 하여 본인의 대략적 점수를 예상해 볼 수 도 있을 듯 합니다.

※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은 판례가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

[문제1] 2023년 올해 시험에서는 행정절차법에서 40점이 나왔습니다.

☞ 내용 : (시정명령처분(사전통지), 시정명령처분(의견제출)을 묻는 문제로 "가평소방서장의 현장조사" 판례를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문제이며 9/3(실전모의고사)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.

☞ 모범답안 예상점수(28점) : 물음(1) : 14점, 물음(2) : 14점

■ 강평 : 문제 1번의 핵심은 "가평소방서장의 현장조사" 물음(1), 물음(2)에 판례를 각각 2~3줄로 잘 정리여 서술하는게 변별력이며 핵심입니다.

[문제2] 2023년 올해 시험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20점이 나왔습니다.

☞ 내용 : 부분공개를 묻는 문제로 "업무추진비의 부분공개" 판례를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문제이며 7/8(진도별 모의), 9월(전국 모의)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.

☞ 모범답안 예상점수(14점)

■ 강평 : 문제 2번의 핵심은 "업무추진비의 부분공개" 판례에서 요구하는 1)부분공개의 요건과 2) 부분공개 하지 않고 전부 비공개한 경우는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.

[문제3] 2023년 올해 시험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20점이 나왔습니다.

☞ 내용 : 허가의 취소(8회 기출)와 주무관청에의 요구(불의타)로 나누어 지며 허가 취소 문제는 기출문제이나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고 주무관청에의 요구문제는 기본서(P 224, 15번 문제)와 정확히 일치하는 문제이나 기본강의에서 학습하고, 모의고사 or 핵심목차노트에 서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답안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☞ 모범답안 예상점수(14점)

■ 강평 : 문제 3번의 핵심은 물음2)에 해당하는 B행정청이 취할수 있는 조치에 관한 사항이며 주무관청인 A 행정청에게 사업의 허가를 취소해 달하는 요구가 핵심입니다.(한줄의 답안이 가성비가 굉장히 높을 듯 합니다.) 물음2)의 경우 백지로만 내지 않고 비슷하게 서술했다면 부분점수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.

[문제4] 2023년 올해 시험에서는 주민등록법에서 20점이 나왔습니다.

☞ 내용 : 주민등록번호(정정사유), 주민등록번호(변경사유)을 묻는 문제로 변경 문제는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문제이며, 정정사유도 변경사유와 함께 시험문제가 나올수 있다고 판단하여 9/3(실전모의고사)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. 9/3(실전모의고사)를 잘 정리했던 분들에게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☞ 모범답안 예상점수(14점)

■ 강평 : 문제 4번의 핵심은 물음1)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(정정사유)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3가지를 모두 썼다면 고득점도 기대할 수 있을 듯 합니다.

남은 시간 꼭 쉬면서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합격을 기원드립니다.

'23년 출제 문제	'23년 모의고사(학원) 문제 등	비고
<p>[1] <10/6 행정절차론 기출문제> 관할 행정청인 A시장(이하 '행정청'이라 한다)은 甲(이 소유한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.)에 대하여 甲의 사전 동의를 받아 甲이 참석한 가운데 <u>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</u>. 甲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<u>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</u>하였다.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<u>시정명령</u>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 이에 甲은 이 사건 처분이 <u>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</u>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(40점)</p> <p>물음1) 행정청은 '<u>처분의 사전통지</u>'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<u>법률위반 사실을 인정</u>하였고,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『행정절차법』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"<u>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</u>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"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 『행정절차법』 상 '<u>처분의 사전통지</u>'에 관하여 <u>설명</u>하고 행정청 주장의 <u>타당성</u>을 검토하시오.(20점)</p> <p>물음2) 행정청은 '<u>의견제출기회 부여</u>'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법률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므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고,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『행정절차법』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 『행정절차법』 상 '<u>의견제출</u>'에 관하여 <u>설명</u>하고, 행정청 주장의 <u>타당성</u>을 검토하시오.(20점)</p>	<p><박문각 9/3 모의고사 1번 문제> 가평소방서장(행정청)은 전화로 "甲"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현장조사 일시를 약속한 다음, 2014. 5. 14. 오후 "甲"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<u>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</u>. 현장조사 과정에서 가평소방서장(행정청)은 <u>무단증축면적과 무단용도변경 사실을 확인</u>하고 이를 확인서 양식에 기재한 후, "甲"에게 위 각 행위는 건축법 제14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<u>시정명령</u>이 나갈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<u>이행강제금이 부과</u>될 것이라고 설명하고, 위반경위를 질문하여 답변을 들은 다음 "甲"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았는데, 위 양식에는 "상기 본인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제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불법건축(증축, 용도변경)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"라고 기재되어 있었다. 그리고 <u>가평소방서장(행정청)은 별도의 사전통지나 의견진술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, 현장조사 다음 날인 2014. 5. 15. 시정명령처분</u>을 하였다.</p> <p>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</p> <p>[물음1] 가평소방서장(행정청)은 시정명령처분 전 "甲"에게 <u>사전통지나 의견제출</u> 기회를 주지 않았으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여 잘못을 시인한 확인서명도 받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를 부여했다고 볼수 있는지 서술하시오.(20점)</p> <p>[물음2] "물음1"의 결과에 따라 가평소방서장(행정청)이 행한 <u>시정명령처분</u>이 위법한지 논하시오.(20점)</p>	<p>[1] [시정명령처분,사전통지, 의견제출 논점] ☞ 9/3 모의고사 출제(1번 문제)</p>

<p>[2] <10/6 행정절차론 기출 2번 문제> 甲은 <u>△시장의 업무추진비</u>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에 근거하여 △시장에게 ‘△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(이하 ‘이 사건 정보’라고 한다)의 공개를 청구하였다.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<u>△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지만, 이름·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</u>하다.</p> <p>그런데 △시장은 “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”는 이유로 이 사건 <u>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</u>을 하였다. 이 사건 정보 중 이름·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할때 △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<u>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</u>한지를 검토하시오.(20점)</p>	<p>[2] <박문각 7/8, 9월 전국 모의고사 번 문제> 甲은 행정청 乙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 등에 관하여 乙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</p> <p>[물음] 공개 청구된 정보 중에는 乙이 주최한 간담회·연찬회 등 각종 행사 관련 지출 증빙에 행사참석자(공무원도 일부 참석함)를 식별할 수 있는 <u>개인정보</u>가 포함되어 있다. <u>乙은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</u>할 수 있는가? (20점)</p>	<p>[1] 7/8일, 9월 전국 모의고사 : 부분공개</p>
<p>[3] <10/6 행정절차론 기출 3번 문제> 甲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<u>주무관청인 A행정청</u>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. 그러던 중 甲은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<u>B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</u>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하고 있다. 이 경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<u>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</u>과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<u>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</u>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(20점)</p>	<p>[3] <책 P 244, 15번 문제>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‘관허사업 제한 규정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.(20점) <해설> I. 사업의 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 (52조 제1항) II. 주무관청에의 요구 (52조 제2항 ~4항)</p>	<p>[1] 책 P244 (15번 문제) : 사업허가의 취소 / 주무관청 요구 [2] 8회 기출문제 : 과태료 체납자 제재</p>
<p>[4]<10/6 행정절차론 기출 4번 문제> 『주민등록법』상 주민등록번호의 ‘<u>정정사유</u>’와 ‘<u>변경사유</u>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(20점)</p>	<p>[4] <박문각 8/5 모의고사 4번 문제>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(7조의2), 주민등록번호의 <u>정정요구</u> 사유(7조의3), 주민등록번호의 <u>변경신청</u>할 수 있는 자(7조의4)에 대하여 서술하시오.(20점)</p>	<p>[1] 8/5 모의고사 출제(4번 문제) : 정정, 변경</p>

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두41811 판결 [시정명령처분취소등]

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.

(1) <사전통지>

현장조사에서 원고가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위반경위를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‘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’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.

(2) <의견제출>

피고 소속 공무원 소외인이 위 현장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전화로 통지한 것은 행정조사의 통지이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로 볼 수 없다. 그리고 위 소외인이 현장조사 당시 위반경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, 이 사건 처분이 현장조사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기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.

(3)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(4) <통합>

‘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’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, ①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②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.